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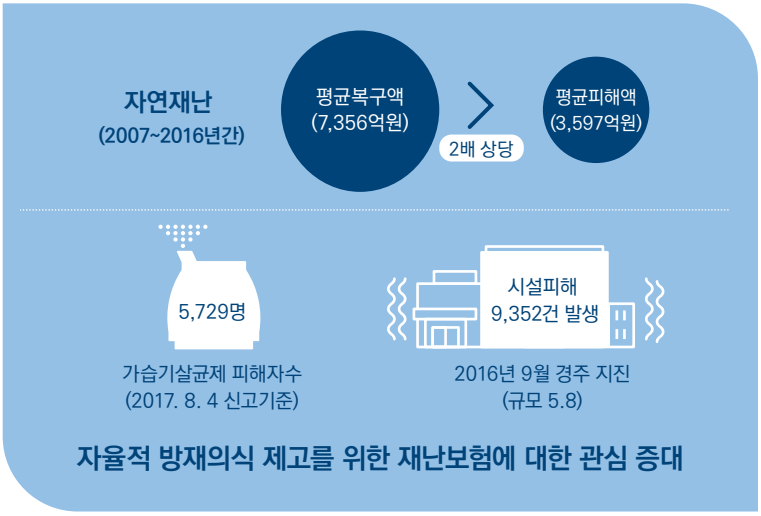
NABO브리핑 NABO Briefing
2017. 11. 1. 제17호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모든 재난은 사회적인 것이다(All disasters are social)” 라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재난·안전 관리 재원배분 체계, 주요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 재난보험 운영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재난 예방·복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정부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재난·안전관리 재원배분 체계, 주요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 재난보험 운영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배분 및 제도개선 방향 모색



I. 정책현황 및 환경변화

II. 재난·안전 예산 관리현황 분석

III. 안전분야별 분석

1.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분석
2.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분석
3. 지진방재 실태 분석

IV. 재난보험 운영실태와 재정운용 분석

NABO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I. 정책현황 및 환경변화

주요 안전분야별 현황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및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20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2018년)

시설물

성능중심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내구성 및 사용성을 감안한 성능평가 실시

지진

지진 대응체계 마련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등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

재난보험

안전산업 활성화

안전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보험 기능 강화

*재난정책보험: 풍수해보험(행안부), 농어업재해보험(농림부, 해수부) 등

II. 재난·안전 예산 관리현황 분석

대상사업 2018년 예산안 기준 재난·안전사업은 491개 (이 중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 대상은 385개)

재 정 2018년 예산안: 14.7조원 규모 (사전협의 대상 예산은 13.8조원으로 전체의 93.5%)

재난·안전 예산 범위 명확화 필요

2017년 기준으로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재난·안전사업으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등이 선정되어 있으나,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R&D)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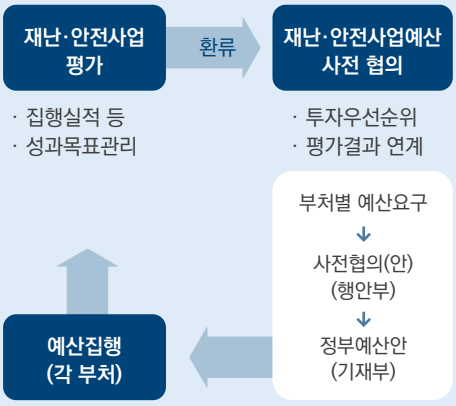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의 실효성

2016~2017년 시행된 사전협의 결과가 정부안 작성시 반영된 정도 미약

재난·안전 예산 평가의 효과성

- 재난·안전사업 평가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개선 필요
- 2016년 사업 평가결과가 2018년 예산안 작성시에 일부 반영된 측면이 확인되지만 통계적 유의성 부족

2015년부터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 중심의 재난·안전 예산 통합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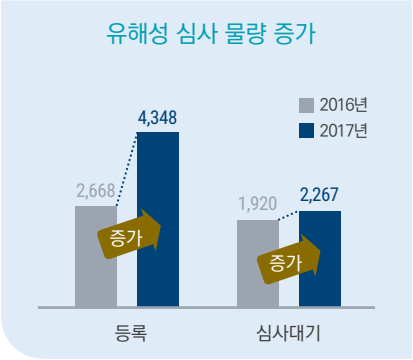
개선방안 재난·안전관리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사전협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 예산 배분 권한의 조율,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환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 위주의 평가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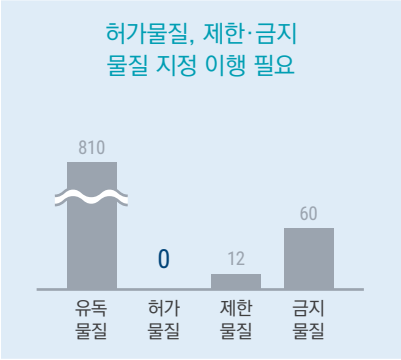
Ⅲ. 안전분야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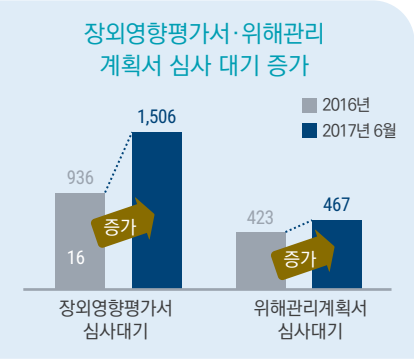
1.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분석

대상사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및 안전점검사업

재 정 2018년도 예산안 기준 화학물질 안전관리 예산은 1,023억원(유해화학물질관리 601억원 반영)







* EU REACH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cern) 174종 운용, 허가물질 31종 관리 중

개선방안 화학물질의 보고, 등록에 따른 유해성 심사 지연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분석

대상사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사업

재 정 2007~2015년 시설물 유지관리업 기성실적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유지관리비용은 2007년 1조 3,027억원에서 2015년 2조 5,432억원으로 95% 상승(연평균 상승률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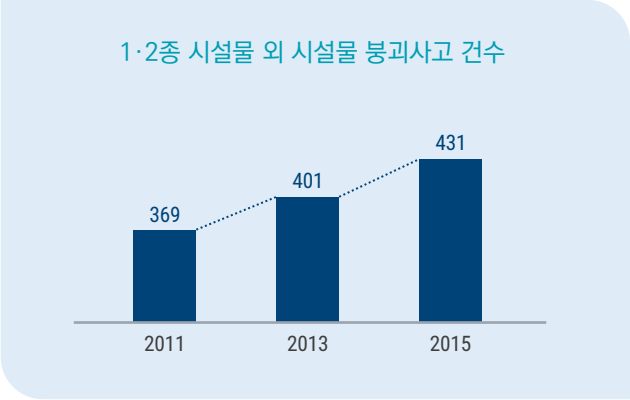
재난위험시설 대책 마련 필요

시설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 사용금지, 개축, 철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일부가 수년 동안 방치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4~6년 주기) 시 기존 시설물 안전등급의 하향 사례 발생

→ 차기 정밀안전진단시까지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



개선방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시설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실시공, 시설물 노후 및 지반약화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

3. 지진방재 실태 분석

대상사업 '시설물 내진대책 추진' 관련 사업

재 정 2018년도 지진방재 국가예산안은 전년대비 13.7% 감소한 3,165억원

내진보강 시기 조정
2017년 3월에 발표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맞추어 각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한 이후 내진보강 추진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실효성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적정 지반조사 수행 필요

신설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정성
원자력 발전소, 원전수거물관리센터(방폐장), 교량, 댐, 터널 관련 내진설계 및 시공 규정 보완 필요

경주지진 이후, 정부는 내진보강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1단계('11~'15년)	2단계('16~'20년)	
		계획	개선
투자규모	6,447억원	1조 7,380억원	2조 8,787억원
내진율	40.9%(3.6%↑)	49.3%(8.5%↑)	54.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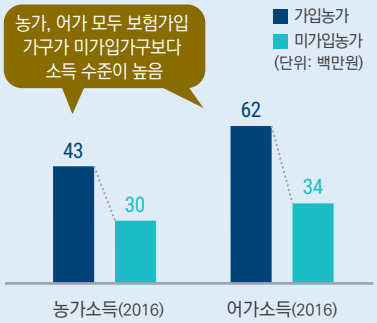
개선방안 실효성 있는 지진방재를 위해 내진 설계 및 보강 내실화를 도모하고, 일반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도 원자력 관련 내진기준과 같이 해외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필요

Ⅳ. 재난보험 운영실태와 재정운용 분석

대상사업 재난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보험금사업

재 정 2018년 예산안 기준 재난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4,665억원(2017년 예산액 4,388억원 대비 6.3% 증가)

재정지원 형평성



재보험 재정건전성

재보험금 지출 대비 재보험료 수입이 부족하여 평균적인 재정손실이 예상 (순재정보조성격)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2016년 보험료 수입 기준 연평균 289억원 재정손실 예상

재보험사업 재원의 타당성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적립하는 손실보전준비금 계정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실상의 국가재보험 운영

개선방안
-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율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보험금사업 지출 중 재보험료 수입과의 연계 필요성이 떨어지는 순재정보조 성격의 지출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추진
- 풍수해보험의 경우, 법령에 국가재보험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고, 재정사업으로 국가재보험을 제공 검토